

인도 점령 지상변압기 어떡하나

법원 “보행권 침해로 장애인 차별” 판결에 한전 ‘전전공공’

광주·전남 4164개 인도에 설치
통행 폭 최소 1.5m 유지 지침 속
기준 미달 수두룩해 대책 고심
한전측 “현실적으로 이설 어려워”
목포시는 현황 전수조사 방침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인근 인도에 설치된 지상변압기가 보행 구간을 69cm만 남겨 둔 채 보도 대부분을 틀어막고 있다.

법원이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지상변압기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결(2월 5일자 광주일보 6면)을 내리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인도에 설치한 4000여개의 지상변압기를 전부 손봐야 하는 실정이 됐을뿐 아니라 막대한 설치 비용 때문에 변압기를 옮겨 설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6일 한전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설치된 지상변압기는 모두 6990개이며, 이 중 4164개(59.5%)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다섯 개 중 세 개는 인도에 설치된 것이다.

지상변압기를 인도에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행로의 유효 폭을 최소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 이상을 보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6일 오전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광주시 곳곳에서는 변압기에 가려 보행 구간 폭을 1.5m는커녕 1m조차 확보 못 한 구간이 수도 있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한 인도는 변압기에 가려져 보행 구간이 69cm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곳 인근의 다른 변압기도 보행구간 72cm만을 남겨 두고 보행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전남중학교 인근 인도도 변압기를 제외한 보행로 폭이 92cm에 불과한 경우가 줄지어 있었으며, 서구 쌍촌동 쌍촌초소년 문화의집 인근 인도도 변압기와 상가 건물 사이로 고작 60여cm 보행 구간만 남겨놓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인도에서는 최근 쌓인 눈이 좁은 구간에 단단히 얼어붙으면서 시민들이 영금영금 보행로를 걸어야 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변압기 등으로 보행로가 급격히 좁아지면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하고 있다.

길이 좁아지면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 심리적 긴장감이 커지고, 지팡이를 수차례 더 짚어 가며 보행 때보다 조심히 통과하는 등 불편이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좁은 길을 통과하는데 집중하다가 관바로 나타난 사거리를 못 알아채 차로도 뛰어 들면 하는 등 위험도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민석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팀장

지상변압기란

송·배전선을 전신주 없이 지하로 매설(전선 지중화)했을 때, 지중 고압선로를 통해 송전되는 고전압 전류를 일반 가정에서 쓰는 220-380V의 저압으로 바꿔주는 장치다.

받아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며, 변압기에 모서리 보호(완충)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보도 설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던 과거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최소 보행로 폭을 갖추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현재는 최소보행로 폭을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 점용허가를 아예 내 주지 않는데, 이 때문에 광주 내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못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러 “보행로 폭 문제가 있는 변압기에 대해서도 도로 점용 허가는 매년 연장해 주고 있는데, 이는 당장 변압기를 옮기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등 전반적인 도시 계획과 정책이 개선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한전에 안전장치 추가를 요청하는 것이 한계”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6일 한전과 함께 변압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는 아직 전수조사 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공익변호사와 함께가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목포와 한전의 전수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확인한 후 타 지자체에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며 “추후 개선이 되지 않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면 집단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 비리 항소심도 잇따라 유죄

수사기밀 유출·압수품 가로채기 등

수사기밀 유출과 압수 물품을 가로채는 등 비리를 저지른 광주·전남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었던 A씨는 압수 수색 정보를 사전에 자신이 수사하는 지역주택재개발 사업체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사건을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형식으로 실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밀이 공소시효 만료 전에 제출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면

서 “나머지 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는 적법한 증거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압수된 도박 자금을 손을 댄 전직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위 B(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완도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도박 관련 압수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도치상 사건의 증거물 현금 90만원을 환수한 건의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동료 경찰관에게 자괴감을 안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파면조치를 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약 유통 가장, 생활고 호소했지만... 결국 실형

경제적으로 벼랑끝에 내몰려 마약 운반책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가장(1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지혜선)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월에 1억 624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공급받아 속직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빠진데다 보이스 피싱 사기와 전세사기까지 당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고립됐다”고 주장

했다.

이러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생활고 때문에 배달, 고층 건물 외벽 청소, 대리운전까지 다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연체돼 수입통장까지 압류당했다”면서 “아버지마저 암수술을 받게되자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설 명절 당일 80대 노모 살해 60대 아들 검찰에 구속 송치

설 명절 당일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60대 아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동부경찰은 A(64)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9일 새벽 12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던 어머니 B(84)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밝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힘들어져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검찰,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 전문가 의견 듣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